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0호 (2023.08.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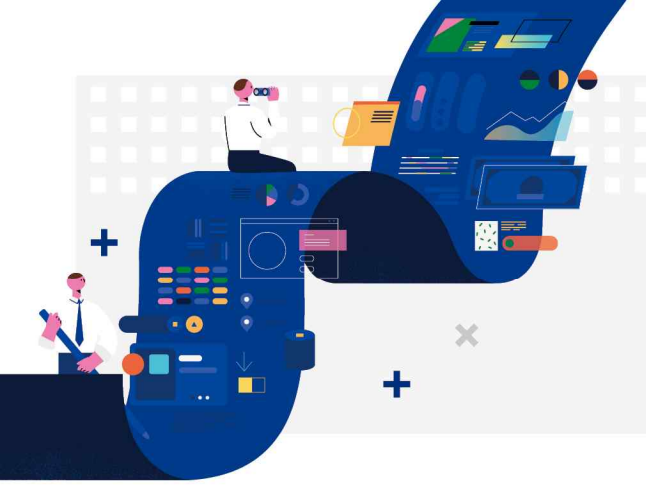
■ 이 슈

(경제) 인천 중소기업 ESG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 국내 정책동향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0호 (2023.08.25)

Cotents

I. 이 슈

(경제) 인천 중소기업 ESG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1

II. 주요 산업 현황

(제조)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 10

III. 국내 정책동향

(보건)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발표 11

(복지) 지하 및 1층 영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11

(산업) 신규 생산·소비 창출을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 12

(무역) 수출 회복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정책금융 23조 원 지원 12

(산업) 지자체 발주계약에 원자재값 상승 반영토록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13

(기술) 정부, 네트워크 기술경쟁 선도할 '오픈랜' 생태계 구축 지원 13

(산업)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14

(교통) 6,000억 원 규모 민간금융 조달로 연안교통산업 경쟁력 제고 14

연구진

최태림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민규량	인천연구원 경제환경연구부 연구위원
상민경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김효영	인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 추진단 연구원
유광민	인천테크노파크 책임연구원

경제

인천 중소기업 ESG 실태조사 결과 및 시사점



#중소기업 #ESG #제조업 #경영트렌드

- 코로나19 유행과 더불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는 이상기후 및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기업에 대한 가치판단에 있어 매출액·영업이익 등의 재무적 요소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고려되는 비재무적 요소도 반영하자는 의미를 담은 ‘ESG’가 전 세계적 트렌드로 확산·강조
 - ESG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업의 3가지 핵심 비재무적 성과지표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머리글자를 딴 단어
 - 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기업활동에 있어 친환경·사회적 책임경영을 실시하고, 지배구조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을 담은 기업성과지표의 하나로, 개별 기업을 넘어 자본시장 및 국가의 성패를 가를 키워드로 부상 중
 - 유럽연합(EU)과 글로벌 기업을 중심으로 급부상한 ESG는 이미 중소기업에게 실체화된 위기이자 기회로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ESG 확산을 위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추진
 - EU는 ‘21.3월 ‘EU 공급망 실사법안(Resolution on Corporate Due Diligence and Corporate Accountability)’을 채택한 후 ‘22.2월 집행위 최종안을 발표하였으며, 1~2년 내 EU 순회원국에서 제도화할 계획
 - 민간시장에서는 애플, 인텔, 스타벅스 등 글로벌 기업의 주도하에 업종별 ESG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구성하고, 공급망 내 거래기업 및 협력사에까지 공동관리를 확대
 - 우리나라 정부 역시 ESG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는데, ‘21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보공시(Public),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의 4개 영역에 대하여 27개 범주, 61개 기본 진단항목으로 구성된 「K-ESG 가이드라인 v1.0」 발표

[표 1] 「K-ESG 가이드라인 v1.0」 진단항목 체계

ESG 영역	범주	진단항목 수
정보공시(P)	정보공시 형식, 정보공시 내용, 정보공시 검증	5개
환경(E)	환경경영 목표, 원부자재, 온실가스, 에너지, 용수, 폐기물, 오염물질, 환경 법/규제 위반, 환경 라벨링	17개
사회(S)	목표, 노동, 다양성 및 양성평등, 산업안전, 인권, 동반성장, 지역사회, 정보보호, 사회법/규제 위반	22개
지배구조(G)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권리, 윤리경영, 감시기구, 지배구조 법/규제 위반	17개

*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21.12) 참고 및 재구성

- ESG는 이미 대기업을 중심으로 기업 전략 및 운영의 중요 변수로 인식되고 있으므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역시 ESG로 인해 주요한 변화를 마주하게 될 것으로 예상
 - 외부 ESG 평가기관의 평가에 대응하고 있는 중소기업들은 이미 ESG를 기업경영의 필수요소이며 지속적 거래관계 유지를 위한 사전준비로 인식
 - (자금조달 측면) ESG 이행실적을 기업 투자 심사의 조건으로 반영하는 ESG 채권, ESG 펀드 등이 출시되면서 상장기업은 투·융자 등 자금조달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ESG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는 향후 중소기업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
 - (공급망 참여 측면) 중소기업의 ESG 이행실적이 저조할 경우 국내외 대기업의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그 반대의 경우 글로벌 공급망에서 중국기업들의 자리를 대체할 기회로 작용 가능
 - (브랜드 이미지 측면) ESG 이행 수준이 높은 기업은 이미지 브랜딩을 통해 실제 매출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 그렇지 않은 기업은 직접적인 매출 감소에 직면 가능



* 자료 : 중소기업중앙회(2023.01)

〔그림 1〕 ESG 필요성과 도입목적에 대한 중소기업 인식 수준

- 정부에서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중소기업의 ESG 준비 및 도입을 위하여 가이드라인 배포, ESG 설명회 진행 등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것만으로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독려하기에는 한계가 존재
 - 중기부가 2021년 11월 발표한 「중소기업 ESG 촉진방안」에는 중소기업의 ESG 인식제고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한 △중소기업 ESG 체크리스트 마련 △ESG 사례집 발간 △대기업 협력사 ESG 지원 촉진 △수출·탄소중립 등 부문별 맞춤형 지원 △중소기업 ESG 민·관 협의회 발족 등의 내용이 포함
 - 2022년 7월에는 벤처·창업초기기업의 성장단계 및 산업 특성을 고려한 「이เอส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시범운용을 실시
 - 이외에도 중기부는 2022년 7월 '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ESG 자가진단 서비스'¹⁾에 기반한 기업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10~11월에는 '지역별 중소기업 ESG 실천방안 설명회'를 통해 정부 ESG 지원사업, ESG 도입 참고·유의사항 등의 정보를 제공
 -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ESG 도입을 위한 투자 자원 및 전문역량 부족과 더불어 경영구조적 측면에서도 자구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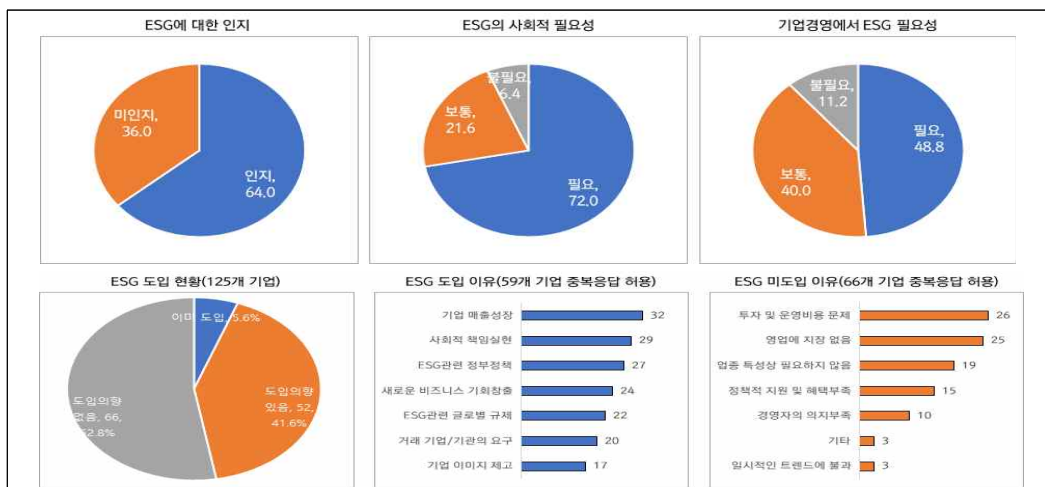
1)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2022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온라인 자가진단 서비스.

[표 2] 중소기업 ESG 도입 제약 요인

구분	주요 내용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 경영자 개인에 집중된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 • 이사회를 통한 경영자에 대한 견제와 감독 기능 미흡
단기적 의사결정 구조	• 현금흐름에 따른 단기실적 중심의 의사결정 • 경영진의 중장기 경영을 위한 자발적 리더십 부족
비재무적 가치 실현 의지 부족	• ESG 기획 및 이행 역량 미흡 • ESG 수행을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어려움
기업 내부 역량 미흡	• ESG에 대한 내부자원 투자 미흡 및 비공식적 역할 분배 • ESG 관련 전문인력 및 역량 확보 어려움

* 자료 : 대한상공회의소(2021.05, 2021.08) 참고 및 재구성

- 인천지역 10인 이상 제조기업 125개사를 대상으로 ESG 관련 실태조사를 수행한 결과, 인천 중소기업은 ESG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나, 기업경영 시의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
- 설문 응답 기업 중 ESG를 도입한 기업은 5.6%(7개)에 불과하여 조사 대상기업 중 대다수는 ESG를 도입하지 않은 상태이며, 향후 도입 의향이 있는 기업 역시 41.6%(52개)에 불과
 - ESG 도입에 긍정적인 기업은 ESG가 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 실현을 위한 방안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으나, 부정적인 기업은 ESG와 기업경영의 실질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인식
 - ESG를 도입했거나 도입 의향이 있는 기업들은 ESG 도입의 이유로 '기업 매출 성장(18.7%)', '사회적 책임 실현(17.0%)', 'ESG 관련 정부 정책(15.8%)' 등을 언급
 - 반면, 도입 의향이 없는 기업들은 ESG 미도입 사유로 '영업에 지장 없음' 및 '업종 특성상 필요하지 않음', '일시적 트렌드에 불과' 등 기업의 경영과 관련이 없음을 드러내는 응답이 전체의 51.4% 수준
 - 한편 정부 및 지자체의 중소기업 ESG 지원프로그램 제공을 전제로 한 ESG 도입 의향 문항에서도 도입 의향이 있는 기업이 약 절반 수준(56.0%)으로 조사되어, 중소기업 ESG에 대한 지원은 도입 의향이 있는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



* 자료 : (재)인천테크노파크(2022.12)

[그림 2] 인천시 중소기업의 ESG 인지 여부 및 도입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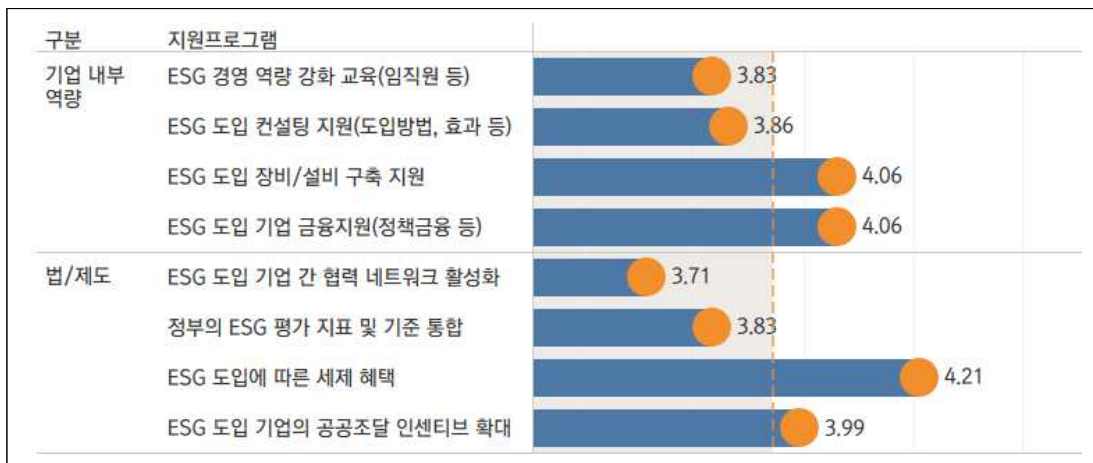
- 인천시 중소제조기업의 ESG 각 영역별 평균 이행률은 E(환경) 41.9%, S(사회) 79.0%, G(지배구조) 75.5% 수준으로, 법적 강제 이행사항 또는 일반적 사회 규범과 관련한 ESG 항목의 이행은 대체로 잘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발적 ESG 항목에 대한 이행 수준은 낮은 것으로 평가
- 환경(E) 영역에서는 ‘유해물질 배출량과 폐기방식 법 규정 준수 여부(88.0%)’, ‘수자원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 법 규정 준수 여부(79.2%)’가 가장 높았고, ‘생산제품 단위당 탄소배출량 측정 및 관리역량’(16.8%), ‘저탄소 제품 제조와 출시를 통한 경쟁력 확보 여부(25.6%)’ 등 자발적 항목의 이행률이 대체로 낮은 수준
 - 사회(S) 영역은 이행률이 90%가 넘는 항목이 4개나 되지만, ‘노조 또는 노사협의회 설치(38.4%)’, ‘근로자 인권구제 처리 절차 마련 여부(59.2%)’, ‘지식재산 및 영업정보 보물관리시스템 운영 여부(64.0%)’의 이행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확인
 - 지배구조(G) 영역의 경우 ‘고객과의 계약 전과정에서의 법률 및 절차공정성 준수 여부(84.0%)’를 포함해 대체로 다른 영역에 비해 높은 수준의 이행률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

E	E1	환경 관련 업무 담당 인력 또는 부서 유무	29.6		
	E2	기업이 배출하는 총 온실가스 측정 및 관리	26.4		
	E3	생산제품 단위당 탄소배출량 측정 및 관리 역량	16.8		
	E4	수자원 사용량과 폐기물 배출량 법 규정 준수 여부	79.2		
	E5	유해물질 배출량과 폐기방식 법 규정 준수 여부	88.0		
	E6	저탄소 제품 제조와 출시를 통한 경쟁력 확보 여부	25.6		
	E7	친환경 기술 투자 및 연구개발 여부	28.0		
S	S1	성별·인종·국적 등 차별없는 고용 여부	89.6		
	S2	계약직, 임시직 직원들의 적정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96.8		
	S3	조직 내 노조(노사협의회) 설치 여부	38.4		
	S4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 금지 여부	92.0		
	S5	근로자 인권구제 처리 절차 여부	59.2		
	S6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제공 여부	96.8		
	S7	위험요인 식별, 관리 및 위험 완화조치 이행 여부	95.2		
	S8	지식재산 및 영업정보 보물관리시스템 운영 여부	64.0		
G	G1	경영진과 조직구성원 간 충분한 의사소통 여부	78.4		
	G2	자금관리와 집행부서의 독립적 설치 및 투명한 업무수행 여부	81.6		
	G3	윤리경영 임직원 행동강령과 방침 명문화 여부	66.4		
	G4	고객과의 계약 전과정에서의 법률 및 절차공정성 준수 여부	84.0		
	G5	임직원 부패, 뇌물수수, 자금세탁 등의 리스크 관리 여부	67.2		

* 자료 : (재)인천테크노파크(2022.12)

[그림 3] 인천시 중소기업의 ESG 영역별 주요 항목 이행실태

- ESG 도입 의향이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ESG 도입 지원정책의 분야를 기업 내부 역량 강화 및 외부의 법·제도로 구분하여 정책 수요조사를 진행한 결과, 모든 지원정책에 대한 수요가 3.5점 이상으로 중소기업의 정책 수요가 탄탄한 것으로 확인
- 전체 평균 이상에 해당하는 지원정책으로는 ‘ESG 도입에 따른 세제 혜택(4.21점)’, ‘ESG 도입 기업 금융지원(정책금융 등)(4.06점)’, ‘ESG 도입 장비/설비 구축 지원(4.06점)’ 순
- 중소기업의 ESG 확산을 위해서는 내부적으로는 탄소저감,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장비/설비 구축과 투자를 위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하며, 법/제도적으로는 ESG 도입에 따른 혜택 제공을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



* 자료 : (재)인천테크노파크(2022.12)

〔그림 4〕 중소기업 ESG 정책지원 수요

- 중소기업의 경우 ESG의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기업별 ESG 이행 수준 역시 제각각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중소기업의 ESG 전면 도입을 위해서는 중장기 관점의 단계적 접근법과 더불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역할 분담이 필요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중소기업이 직접적으로 ESG 이행실적을 요구받는 경우가 드물어 중소기업의 ESG 준비상태 및 ESG 영역별 이행수준은 기업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행수준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정부 정책지원에 대한 수요에서 차이가 존재
- 이에 정부 및 지자체는 일회성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보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ESG의 필요성, ESG 도입 및 활용전략 등의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면서, ESG 도입을 본격화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인센티브 요인을 확대할 필요
- 중소기업의 ESG 도입을 위한 중장기적 지원 수행을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중소기업 ESG 공시기준 마련 △세제 및 공공조달 인센티브 발굴·확대 △ESG 도입 우수기업 금융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지자체는 지역 기업의 상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하여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 수행이 요구

-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향후 기업의 위기이자 기회요인이 될 ESG에 대해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응 역량은 미흡한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인천시의 정책적 지원 방안 모색 필요
 - 인천지역은 타지역에 비해 중소기업의 비중이 높고 제조업 기반이 뿌리산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어 탄소저감, 오염물질 배출 등 환경(E) 측면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인 채용으로 인한 사회(S) 측면, 투명성 및 윤리경영과 연관된 지배구조(G) 측면 등 ESG 관련 이슈가 산적해 있는 상황
 - 뿌리산업 중심인 인천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ESG 확산이 제조업 혁신과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에 포함될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으므로, 중소기업들의 적절한 ESG 대응 준비를 위한 지원책 마련이 중요
 - 지자체는 중앙정부에 비해 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도와 이해도가 더 높으므로, 지역 내 ESG 도입 희망 기업을 파악하여 △ESG 도입 컨설팅 △ESG 경영 역량강화 교육 등을 진행하고, ESG 도입 기업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활성화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 기업에 밀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
 - 특히 ESG 도입 지원정책에 있어 ESG가 단기간에 그치는 트렌드가 아니라 기업이 준수해야 하는 글로벌 규범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강조하여, 중소기업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체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수반이 요구
 - 한편 인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ESG 확산 정책의 효과적인 설계를 위해서는 인천 중소기업의 ESG 도입 현황진단 및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필요
 - 지역 내 중소기업의 ESG 경영 도입 및 진단을 위한 실태조사를 수행하면 지자체 지원사업의 효율성 및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으며, 각 기업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수행 가능
 - 실태조사 결과 ESG 경영 도입이 시급한 중소기업의 경우, 전문가를 통해 ESG 도입 필요 사항 진단을 수행하고 맞춤형 지원프로그램을 연계·제공하도록 하는 ESG 경영 도입 기반 조성 사업 등을 개발·제공
 - 지역 중소기업의 ESG 도입 실태조사에 기반하여 ESG 도입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사례집을 구축하는 작업을 통해 산업현장의 유사 중소기업이 참고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의 제공이 요구

제조 > 바이오산업 시장 동향



#화장품 #기타 화장품 #의약품

- 2023년 7월 기준 화장품 부문 수출이 2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증가한 가운데, 바이오헬스 부문의 수출액은 수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를 기록
 - 화장품 부문은 주요 수출국이었던 중국의 수출실적 감소에도 불구하고, 수출국 다변화를 통해 수출액이 전년동기대비 약 5.7% 증가
 - 바이오헬스 부문은 주요 글로벌 업체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확대에 따른 품질 및 가격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출액이 7개월 연속 전년동월비 감소²⁾
 - 바이오헬스 부문의 7월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약 17.6% 감소한 9억 6,300만 달러 수준으로, 바이오헬스 수출액이 10억 달러를 하회한 것은 2020년 2월 이후 41개월만
 -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진단키트를 제외한 주요 의료기기 품목에 대한 의료시장 내 수요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의약품이 7개월 연속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의 감소세를 보이며 바이오헬스 부문의 회복이 지연

[표 1] 국내 바이오산업 수출 추이

(단위 : 백만\$, %)

구분	'22.12	'23.01	'23.02	'23.03	'23.04	'23.05	'23.06	'23.07
화장품 (증감률)	594 (-13.9)	467 (-17.3)	646 (12.5)	774 (9.3)	679 (-5.3)	769 (-8.1)	746 (13.7)	649 (5.7)
바이오헬스 (증감률)	1,246 (-34.1)	1,113 (-33.6)	1,067 (-32.4)	1,199 (-35.1)	1,026 (-18.3)	1,089 (-27.3)	1,299 (-6.0)	963 (-17.6)
의약품 (증감률)	721 (-34.2)	675 (-31.6)	603 (-33.9)	731 (-37.2)	613 (-24.3)	611 (-37.7)	788 (-10.6)	561 (-22.7)

*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3.08.01)'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증감률은 전년동월대비로 표기

2 : 각 자료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 (전국)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는 화장품과 의약품의 경기흐름이 다르게 나타나는 가운데, 수출은 전반적으로 전월대비 감소
 - (생산지수) 2023년 6월 국내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가 80대로 수렴하며 감소하는 가운데, 의약품 생산은 등락을 반복하며 개선

2)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동향(2023.08.01)'.

- 2023년 6월 화장품 관련 전국 생산지수는 전년동월대비 10.4% 감소한 86.6으로, 2022년 6월 이후 1년 이상 전년동월대비 두 자릿수 감소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유지
- 2023년 6월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7.0% 전년동월대비 4.7% 증가한 139.5로, 국내 의약품 생산은 2021년 이후 완만한 증가세를 지속
- **(품목별 수출액)** 2023년 7월 바이오산업은 품목과 관계없이 전월대비 저조한 수출실적을 기록
 - 화장품 및 기타 화장품의 수출액은 전월대비 각각 12.6%, 1.5% 감소하였으나, 수출국가 다각화에 성공하며 전년동월대비로는 5.1%, 10.6% 증가³⁾
 - 의약품 수출액은 전월대비 28.6%, 전년동월대비 22.7% 감소한 561,066천 달러로, 글로벌 의약품 시장 경쟁 심화로 2022년 10월 이후 전년동월대비 감소세가 지속

○ **(인천)** 인천시의 바이오산업 관련 생산지수는 품목별로 경기에 차이가 보이고 있으나, 수출실적은 품목과 관계없이 부진

- **(생산지수)** 2023년 6월 기준 화장품 관련 생산지수는 전월대비 0.9%, 전년동월대비 2.3% 감소한 104.5를 기록했으며, 의약품 생산지수는 전월 및 전년동월대비 크게 개선된 139.5를 기록
- **(품목별 수출액)** 2023년 7월 인천지역 화장품 및 의약품 부문의 수출은 약보합세를 보이며 안정되고 있으나, 기타 화장품 수출은 여전히 큰 폭의 등락을 반복
 - 화장품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6.1%, 전월대비 14.0% 감소하여 지난 3월부터 전년동월비 감소세가 지속 중이며, 기타 화장품은 전년동월대비 73.1%, 전월대비 68.2% 감소하여 2021년 이후 최저 수출액을 기록
 - 의약품 수출 역시 전월대비 31.3%, 전년동월대비 29.5% 크게 감소하며, 바이오산업 전 부문의 수출이 부진한 상황

[표 2] 국내 바이오 관련 산업생산지수 및 증감

지역	항목	'23.03	'23.04	'23.05 (p)	'23.06 (p)	'22.06	전월비 (%)	전년 동월비 (%)
전국	화학물질 등 제조업	94.0	88.9	86.6	86.6	96.6	0.0	-10.4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78.8	75.5	75.5	77.2	95.2	2.3	-18.9
	의약품 제조업	133.2	120.3	119.7	128.1	119.3	7.0	4.7
인천	화학물질 등 제조업	114.5	107.7	105.4	104.5	107.0	-0.9	-2.3
	의약품 제조업	133.8	133.4	112.9	139.5	108.9	23.6	28.1

* 자료 : 통계청 '광업제조업동향조사 - 시도/산업별 광공업생산지수(2020=100)' 참고 및 재구성

* 주1 : 산업생산지수 파악에 활용한 항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반으로 구분하였으며,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C20)' 및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C204)',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C21)'의 자료를 이용함. 인천지역 자료는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에 해당하는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상위 항목을 이용

2 : 생산지수는 2020년을 기준으로 하는 원지수를 이용하였으며, 최근 2개월 수치는 잠정치로 추후 변동 가능

3) 국내 화장품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의 젊은층을 중심으로 '귀차오(国潮)'라 불리는 애국소비가 유행함과 더불어 리오프닝 이후의 중국경제 부진으로 對중국 수출액은 감소했으나, 미국, 홍콩, 대만,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수출국가 다변화로 총수출액은 증가.



[화장품(MTI2273)]



[기타 화장품(MTI2279)]



[의약품(MTI2262)]

* 자료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 수출입 통계' 자료 참고 및 재구성

* 주 : 수출 금액은 1,000\$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그래프 좌측은 전국 기준, 우측을 인천 기준으로 작성

[그림 1] 바이오 품목별 수출 동향(2023.07)

[부록] 주요 산업 수출입지표(2023.07 잠정)

(단위 : 십만\$, %)

	전국					인천				
	수입		수출		수지	수입		수출		수지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금액	증감	
반도체	100,138	-10.6	136,650	-22.4	36,512	15,281	-4.7	16,586	-22.6	1,305
자동차	13,712	-14.6	76,961	9.7	63,249	1,081	-28.1	7,030	22.0	5,948
기계장비	49,053	-19.0	58,021	-5.9	8,968	3,300	-39.8	4,802	3.0	1,502
바이오-의약	7,665	20.4	4,407	-20.9	-3,257	1,162	120.0	2,737	-29.6	1,574
바이오-화장품	1,634	4.1	6,285	3.8	4,651	22	12.9	1,342	-6.3	1,321

* 자료 : K-stat 무역통계 '품목별, 지역별 수출입 통계' 참고 및 재구성

* 주1 : 각 산업의 통계 원자료 참고 시 품목명은 순서대로 △전자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음성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과 음성의 기록기·재생기와 이들의 부분품·부속품(HS85) △철도용이나 궤도용 외의 차량과 그 부분품, 부속품(HS87) △원자로·보일러·기계류와 이들의 부분품(HS84) △의료용품(HS30) △정유와 레지노이드, 조제향료와 화장품, 화장용품(HS33) 등

2 : 각 지표의 증감은 전년동월대비 비율로 표기

보건

보건복지부,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 발표



#보건복지부

- 보건복지부가 지역별 병상관리 강화를 통한 보건의료체계의 효율성 및 지역완결성 제고를 목표로,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을 발표
 - 복지부는 2027년 병상수급 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지역별 병상관리 기준을 마련했으며, 분석 결과에 따라 각 지역을 (병상) △공급 제한 △공급 조정 △공급 가능 지역으로 구분
 - 병상 공급 제한 및 조정 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병상 공급을 제한하고, 시·도의 병상수급 현황에 대한 상시 점검 및 정기 통계 산출을 통해 매년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 조정·보완에 활용할 계획
 - 의료계·이용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여, 시·도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의 기본시책과의 적합성 여부, 시·도 관리계획 등에 대한 조정 및 자문 역할을 수행하도록 운영 예정
 - 또한 1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의 신·증설의 경우 의료기관 개설위원회의 사전 심의·승인을 받도록 의료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
 - 시·도는 금번 발표된 병상관리 기준을 바탕으로 지역별 의료 이용, 의료 생활권 등 지역 상황을 고려한 병상수급 및 관리계획을 오는 10월 말까지 수립할 계획

복지

지하 및 1층 영업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중소벤처기업부

-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8월 10일부터 소상공인의 풍수해보험 본인부담금 전액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신청을 시작
 - 동 사업은 카카오페이 및 소상공인연합회와 체결한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가입 촉진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사업장 주소가 지하층이나 1층인 소상공인(전통시장 포함)을 대상
 - 풍수해보험은 주택·온실·소상공인(상가, 공장)이 가입대상인 행정안전부 관장 정책보험으로, 채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지진에 따른 재산피해를 보상
 - 사업의 기금은 카카오페이의 기부금(10억 원)을 통해 마련되었으며, 중기부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제3자 기부가입 재원의 효율을 고려해 취약계층인 지하층 및 1층 소상공인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
 - 신청기간은 8월 10일 오후 3시부터 기부금 소진 때까지며, 신청은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 앱 '보험-풍수해보험' 탭을 통해 진행 가능

#농림축산식품부

- 정부에서 신규 생산·소비 창출 및 수출 확대를 목표로 반려동물 연관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대책’을 발표
 - 지난해 국내 반려동물 연관산업 시장 규모는 8조 원 규모로 내수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반려동물에 적합한 분류·표시·평가 제도·인프라 등의 정책적 지원이 전반적으로 부족
 - 이에 정부는 반려동물 연관산업 육성을 통한 신시장 창출과 수출 확대를 위해 △4대 주력산업 육성 △성장 인프라 구축 △수출산업화 등 3대 추진전략을 발표
 - 반려동물 연관산업 중 펫푸드, 펫헬스케어, 펫서비스, 펫테크를 4대 주요 부문으로 설정하고, 반려동물 사료, 진료, 관광 및 장례, 데이터와 관련한 산업기반을 확충
 -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벤처투자 및 자금지원을 강화하고, 푸드 및 디지털 헬스케어 등 신기술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할 계획
 - 수출 유망 해외시장에 대한 정보 및 수출바우처를 확대 제공하고, 동물용 의약품 및 의약품 등의 개발과 인증을 위한 지원을 강화

#금융위원회

- 8월 16일 금융위원회는 대외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을 확정·발표
 - 이는 대통령 주재 수출전략회의에서 발표한 △주력산업 수출경쟁력 강화 △12개 분야 신수출 동력 확충 △범부처 수출 총력지원 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
 - 수출금융 종합지원방안 요약

지원 방향	주요 정책
신수출판로 개척지원	(특화상품) 해외 신시장·대기업 동반 진출 기업 대상 4조 1,000억 원 이상 규모 공급 (보증우대) 은행권·보증기관 협력으로 금리 1.5%p 인하, 보증료 및 한도 우대 (공급망 대응펀드) 핵심품목 관련 소부장기업, 현지진출국 대상 5,000억 원 펀드 조성
수출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정책금융 추가) 20대 수출 전략분야에 대한 13조 3,000억 원 정책금융 추가 공급 (시중은행) 보증기관 특별출연 및 자체 우대상품 마련을 통한 5조 4,000억 원 공급 은행상품별 금리 최대 1.5%p 우대, 보증료 최대 0.8%p 우대
우수 수출기업 애로 해소	(무역금융 부담완화) 우수 수출기업 수출환어음 매입할인을 최대 1.7% 인하, 수입신용장 발급수수료 최대 0.7%p 인하, 만기 최장 1년 확대 (환변동 위험) 위험 대비를 위한 선물환 계약 수수료 최대 90% 인하, 의무 납입금 면제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계약에 있어 물가 변동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시 계약금액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17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시작
 -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와 업체 간 계약 해제·해지에 따라 다른 업체와 수익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계약당사자가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물가변동 조정 요건이 개선
 - 기존 계약 체결일 기준 90일이 경과하고, 품목조정률이 100분의 30이상 증감된 경우에는 물가변동을 반영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가능
 - 또한 공사 자재의 가격 급등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요건도 기존 '특정규격 자재의 비중이 공사비(순공사원가)의 1% 초과'에서 '0.5% 초과'로 완화할 예정
 - 한편, 현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13종 중 9종에만 이루어지는 수익계약도 개정안에서는 나머지 녹색기술제품, 산업융합품목, 산업융합 신제품, 정합인증제품, 물산업 우수제품 4종에도 적용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할 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4월 출범한 '오픈랜 인터스트리 얼라이언스(ORIA)'의 운영 방향을 제시하는 ORIA 출범 선포식을 개최하며, 「오픈랜 활성화 정책 추진방안」을 발표
 - 동 추진방안은 △전(全)주기 상용화 지원 기반(인프라) 구축 △기술·표준 경쟁력 확보 △민·관 협력 기반 생태계 조성을 주요 골자로 계획
 - 인프라 구축을 위해 기구축된 오픈랜 성능 시험장(테스트베드)에 국제 제조사의 장비를 도입해 국내 기업의 시험·실증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체계(K-OTIC) 구축 및 국제 오픈랜 장비 상호운용성 검증 행사 개최를 진행할 계획
 - 오픈랜 부품·장비·소프트웨어 등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외 표준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주요 국가와의 국제공동연구도 적극 추진할 예정
 - 민·관 협의체인 ORIA 설립을 통해 오픈랜 기술 개발 및 고도화를 촉진하고, 국내·외 오픈랜 수요 발굴과 확산을 주도하는 구심점으로 활용
 - ORIA에서는 정부 정책과 연계하여 △오픈랜 R&D 단계별 이행한 기획·수립에 동참 △국내·외 실증사업 주도 및 상호운용성 검증 행사 지원 △오픈랜 장비 국제인증체계 구축 △오픈랜 국제표준화 적극 참여 등을 수행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ORIA 비전 및 전략을 발표

산업 > 50인 미만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

- 8월 18일부터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기준에 따라 1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현장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설치·운영이 의무화
 - 지난 2021년 8월 휴게시설 의무화 근거 마련 이후 소규모 사업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두었던 유예기간이 만료되어 2023년 8월 18일부터는 일정 기준 이상의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의무적인 휴게시설 설치가 필요
 -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휴게시설 의무화 이후 다양한 방법으로 제도 안착을 지원한 만큼, 적용 대상 기업의 대다수가 법에 따라 휴게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
 - 이에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려운 경영사정 등으로 인해 아직 휴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2023년 말까지 특별지도기간을 운영할 계획
 - 특별지도기간 동안은 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보다는 컨설팅과 시정 중심의 현장 지도점검을 통해 제도 수용성을 높일 예정

교통 > 6,000억 원 규모 민간금융 조달로 연안교통산업 경쟁력 제고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부가 시장 맞춤형 제도개선을 통한 연안교통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을 수립·확정
 - 동 대책은 민간 시장이 주도하고 공공이 뒷받침하여 연안교통의 체질을 바꾸는데 주력할 예정이며, △연안교통시장 활력 제고 △전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등을 추진
 - 연안교통 안전 강화 및 산업 육성 대책 요약

핵심전략	추진 과제	주요 내용
연안교통 시장활력 제고	민간금융 활용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 강화	• 금융지원 강화, 중소기업 맞춤형 지원
	국가보조항로 전면 개편	• 민간 선박투자, 위탁을 통한 운영효율화
	시장의 자율성·자생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 상생여객 인증제 도입, 친환경선박 전환 세제지원
	첨단기술 도입을 통한 시장 지속가능성 제고	• 탄소중립 친환경선박 도입, 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전 국민 여객 안전·편의 향상	전 국민 연안교통 안전 정착	• 안전시설 보강, 전주기 안전관리 및 검사결과 공개
	대국민 여객 편의성 향상	• 예비선 추가 확보, 모바일 서비스 강화
	섬 관광 접근성 향상	• 대형여객부두 개발, 여객선 환승할인체계 구축
	관광콘텐츠 개발 등 여객수요 창출	• 섬 기반 관광콘텐츠 및 여객선 이용 체험상품 개발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생안정 지원	섬 주민 민생안정 강화	• 여객의 대중교통 역할 강화
	연안교통 관리기반 마련	• (가칭)연안교통기본법 제정을 통한 통합관리 기반 마련

참고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우리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는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발표”, 2021.12.01.
- 관계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v1.0」, 2021.12.
- 중소기업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을 위한 ESG 우수사례집」, 2023.01.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준비 민·관 협의회 발족”, 2021.11.23.
- 중소벤처기업부, “제3차 중소기업 ESG 준비 민관 실무협의회’ 개최”, 2022.07.04.
- 중소벤처기업부, “「이에스지(ESG) 벤처투자 표준 지침(가이드라인)」 마련해 시범운용 실시”, 2022.07.13.
-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위한 이에스지(ESG) 실천방안 설명회 개최”, 2022.09.20.
- 대한상공회의소, “ESG경영과 기업의 역할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2021.05.30.
-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 ESG 추진전략」, 2021.08.
- (재)인천테크노파크, 「인천 중소기업 ESG 실태 분석 및 지원방향」, 2022.12.
- 산업통상자원부, “월별 수출입 동향(매월호)”
- 국가통계포털(KOSIS),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 K-stat 무역통계, ‘국내 품목별 수출입 통계’ 및 ‘국내 지역별 수출입 통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적정 수준의 병상 유지…“수도권 의료 쏠림도 방지한다””, 보건복지부, 2023.08.08.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하층·1층서 영업하는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무료 가입”, 중소벤처기업부, 2023.08.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펫푸드·펫헬스케어 등 반려동물 연관산업,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 농림축산식품부, 2023.08.09.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민간·정책금융, 수출 회복·경쟁력 강화에 23조 원 규모 지원 나선다”, 금융위원회, 2023.08.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자체 발주계약, 원자재값 상승 등 반영…기업 부담 낮춘다”, 행정안전부, 2023.08.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네트워크 기술경쟁 선도할 ‘오픈랜’ 생태계 구축 지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3.08.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0인 미만 사업장도 현장근로자 위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고용노동부, 2023.08.1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연안교통산업 경쟁력 높인다…6000억 원 규모 민간금융 조달 추진”, 해양수산부, 2023.08.17.

인천 경제산업 ISSUE&TREND

제23-10호(2023.08.25)

발 행 처 인천연구원
발 행 일 2023년 08월 25일
주 소 (22711)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98
전 화 032-260-2600
홈페이지 www.ii.re.kr

본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의견으로 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인천연구원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